

‘동남권 신공항’ 건설 5개 광역단체

최종 입지여부 ‘촉각’

**상반기중 소요 예산·입지 등 용역 발주
유력후보 밀양서 관련세미나 개최 ‘주목’
“5개지역 협력·공감하는 곳 결정 돼야”**

동남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부의 지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최종 입지선정을 두고 벌써부터 관련 지역간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대구·경북을 비롯해 5개 광역단체가 공동 협약을 통해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최종 입지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 이해 관계가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동남권 신공항과 관련, 다음달 1일 국토연구원에 공항 건설에 대한 예비용역 조사를 발주한다. 동남권의 미래 항공수요, 기존 공항의 용량분석, 향후 추진과제를 집중 검토해 긍정적 결과가 나오면 공항입지, 소요예산 등을 다룰 본 용역이 올 상반기 중 발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입지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향후 입지 선정에 대한 선점을 기대하면서 외곽

여론 조성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지난 12일 밀양시청에서 열린 동남권 신공항 건설 정책 세미나는 그런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밀양시가 주관하고 대구경북·부산·울산발전연구원이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국토 동남권 허브 공항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지만, 유력입지로 거론되는 밀양에서 이같은 행사가 열린 점이 특히 주목을 받았다.

엄용수 밀양시장은 이날 “현 단계에서 밀양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여러 후보지가 있을 것이고, 용역 결과에 반드시 따르겠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반면 부산지역에서는 가덕도를 포함, 지리적으로 가까운 남부권 공항에 대해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날 세미나에서도 부산지역 인사는 부산권역 입지에 대한 희망을 내심 비

치기도 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최근 이와 관련, “이미 가덕도는 국토연구원 용역에서 입지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았고, 그래서 5개 광역단체장들이 합의해 동남권 신공항을 공동 건의한 것이 아니냐”면서 “입지는 5개 지역이 공감하는 선에서 향후 정부 용역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

정웅기 대구경북연구원 불류교통팀장(교통공학 박사)은 “5개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이민큼 성사된 것을 상기해야 한다”며 “입지 문제는 워낙 미묘한 사안이라 지금으로서는 공론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대구경북연구원은 공항 건설 계획이 본계도에 오르면서 관련 지역과의 협의를 강화, 지역간 협력의 틀을 더욱 공고히 쌓아나가기로 했다. 대구시와 대경연구원은 21일 대구경북연구원에서 5개 자치단체 공항담당 및 지역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의 용역발주에 앞서 공항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한다. 또 대구상공회의소는 부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27일 민간협의체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